

사회신뢰의 수준 및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

김태중 (KDI 국제정책대학원)

I. 서론

협력을 촉진하는 일체의 무형의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은 흔히 네트워크, 규범, 제도, 신뢰 등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네트워크 안에서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대해 미래에 보복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행동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했을 경우 네트워크 안에서 그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어 평판에 손상을 입게 되므로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협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규범은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여 줌으로써 협력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법제도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개인간의 계약을 보호함으로써 협력을 촉진한다.

네트워크에만 의존하여 사회적 협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협력의 대상이 제한됨으로써 총체적 효율이 저하된다. 도시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익명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잘 모르는 타인들과 크고 작은 일에 협력해야 할 일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법규범과 제도는 사회적 협력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이지만, 우리가 일상의 경제생활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협력의 사안들을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처리해 나갈 수는 없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를 주목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신뢰가 사회적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른바 호혜성(reciprocity)의 개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호혜성은 다소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공정하고 친절한 행동에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선의를 가지고 대응하려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공정하고 않고 적대적으로 행동해 올 경우 역시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인간행동의 경향성을 가리킨다.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배신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신뢰를 보여주는 타인에 대해 우리는 상대방의

선의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선의를 가지고 대응하려는 행동경향을 지닌다. 이렇게 시작되는 상호관계는 협력의 성과를 누리면서 신뢰가 점증되어 가는 선순환의 궤적을 그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상대의 행동으로부터 불신을 느낄 경우 자신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에 따라 신뢰의 축적 및 선순환은 요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뢰는 이른바 특수화된 신뢰와 (particularized trust 혹은 personalized trust) 사회신뢰로 (social trust)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특수화된 신뢰는 잘 알고 지내는 동료, 이웃, 친구 들 사이에서의 신뢰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사회신뢰는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지칭한다. 흔히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화된 신뢰는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입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친구의 수도 많고 친구와 만나는 빈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화된 신뢰는 분명히 신뢰를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협력의 대상을 일정 범위 안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협력의 문제를 사회적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동시에 비교적 좁은 신뢰의 동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타인들을 협력의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킬 위험도 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야마(1996)는 널리 읽힌 그의 저서에서 한국을 저신뢰사회로 규정한 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흔히 타인의 불신을 경험하고 산다. Knack and Keefer(1997)가 국제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이하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0.8%가량 낮아진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는 대단히 절실한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횡단면 비교, 시계열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어 사회적 신뢰의 수준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변화의 경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6년도에 실행된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의 결과와 함께 1981년에서 2004년까지 4차례의 사이클로 진행되어 자료를 축적해 온 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각의 조사 사이클은 1981-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에 해당되면 각각의 기간 동안에 21, 43, 53, 70 개 국가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1982, 1990, 1996, 2001년, 4차례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바 있다. 국가별, 시기별로 설문문의 구성은 다소 상이하지만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제 및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는 최선의 자료라고 판단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저하하고 있으며, 그 저하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세대별로 사회적 신뢰의 추이를 추적해 본 결과 50년대, 6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적 신뢰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자들 가운데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사회신뢰의 수준 및 추이에 관한 국제비교

우선 사회적 신뢰의 수준 및 추이를 간단히 <표 1>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사회신뢰의 수준 및 추이의 국제비교

국가	I (81-84)	II (89-93)	III (94-99)	IV (99-04)	IV-I
한국	0.36 (13/21)	0.34 (16/43)	0.30 (13/54)	0.27 (27/70)	-0.09
미국	0.39 (9/21)	0.49 (8/43)	0.35 (9/54)	0.40 (18/70)	0.01
일본	0.38 (12/21)	0.38 (13/43)	0.40 (6/54)	0.40 (10/70)	0.02
영국	0.42 (7/21)	0.42 (11/43)	0.29 (15/54)	0.28 (26/70)	-0.14
스웨덴	0.52 (2/21)	0.60 (2/43)	0.57 (2/54)	0.64 (2/70)	0.12
스페인	0.33 (14/21)	0.32 (18/43)	0.29 (18/54)	0.35 (21/70)	0.02
캐나다	0.47 (4/21)	0.51 (6/43)	N/A	0.37 (17/70)	-0.1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각 셀에 있어 괄호 밖의 숫자는 사회신뢰로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WVS 사이클에서의 상위로부터의 각국 순위임. 마지막 열의 숫자는 조사기간중 최근-최초 사이의 증감 정도를 나타냄.

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가 세계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에 들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표에 비교를 위해 제시된 선진국들 가운데 스페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가 선진국 그룹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신뢰는 조사기간에 따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변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변동의 유형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한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보이지만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0.35-0.40 대로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미국의 경우는 조사 시기에 따라 사회신뢰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스웨덴의 경우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여타 북유럽 국가들과서와 마찬가지로 늘 세계 상위권을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뢰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부러움을 살 만하다. 반대로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기간 중에 사회신뢰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대조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스페인의 경우이다. 스페인은 선진국 가운데 20세기에 있어서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식민지 지배는 겪지 않았을지언정 근대화의 과정을 늦게 시작한 편이며, 이념에 바탕을 두고 격렬한 내전을 경험하였고, 오랜 기간의 우파 독재를 거쳐 20세기 후반 비교적 늦은 시기에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간의 불신과 갈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사한 역사의 궤적을 반영하여서인지 조사기간 III기까지는 완만하게 사회신뢰도가 저하되면서 우리나라와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두 나라에서의 사회신뢰의 추이는 길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세적 저하 경향이 멈추지 않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은 이러한 경향에 제동을 걸고 어쩌면 반전의 계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보인다.

부록에서는 각 조사시기별로 각국의 사회적 신뢰도와 함께 국제순위를 <표 A-1>로부터 <표 A-4>까지로 정리해 두었다.

한 시점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높고 낮음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표본오차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시기적으로 대중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스캔들이나 정치적 사건이 있을 경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20여년간의 기간을 걸쳐 한번의 반전도 없이 저하 경향이 계속되는 것은 우려스러우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표 2>에서는 조사기간 중 사회신뢰도가 증가한 국가들과 하락한 국가들을 분류해 보았다. 사회신뢰도가 하락한 국가 가운데 하락폭이 5%를 넘는 나라에 대해서는 초기 및 후기의 신뢰도를 괄호 안에 병기해 두었다.

표 2의 자료를 보면 개도국 가운데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사회신뢰도가 증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락하는 나라가 있어 이 면에서는 일률적인 양상을 발견할 수 없다.

사회신뢰도가 5% 이상 저하된 나라들은 (1) 러시아, 폴란드 등 사회주의로

부터 시장경제로 이행을 경험하면서 개혁 초기의 낙관이 개혁의 현실 속에서 상처 받은 국가들과 (2)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 등 심각한 통화 위기를 경험했던 나라, (3)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영어권 국가로 대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사회신뢰도가 증가하는 나라와 하락하는 나라

신뢰도가 증가하는 국가	방글라데시, 벨기에,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인디아, 이태리, 일본, 몰타,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 리코, 스페인,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베네주엘라
신뢰도가 하락하는 국가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0.24->0.15), 오스트레일리아 (0.47->0.40), 보스니아 (0.27->0.16),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0.47->0.37), 중국 (0.59->0.53), 크로아티아, 체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0.42->0.28), 헝가리(0.32->0.22), 아일랜드, 한국 (0.36->0.27), 라트비아 (0.31->0.25), 리투아니아 (0.31->0.25), 몰다비아 (0.22->0.14), 멕시코 (0.30->0.21), 폴란드 (0.28->0.18), 포르투갈 (0.21->0.12), 루마니아 (0.16->0.1), 러시아 (0.35->0.23), 남아공화국,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조사기간 중 신뢰도가 하락한 국가 가운데 하락폭이 5%, 즉 0.05를 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수치를 괄호 안에 제시하였음.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신뢰도 하락폭은 0.36에서 0.27로 9% 가량으로 나타나 캐나다, 영국,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등에 이어 그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III. 신뢰의 저하 원인에 대한 시론적 분석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신뢰도가 낮고 그 저하가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선 요구되지만 실증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는 현실은 20세기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되짚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근대 이전의 왕조 체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한 식민지배를 받아 들이게 된 점, 참혹의 극을 달린 전쟁,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억압하면서 정부주도로 진행된 개발, 아직도 온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힘든 민주화의 여정 등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제도와 규범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 여건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토착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이식된 측면이 있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서 법제도의 운용이 정권의 편의에 영향 받은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법규범 및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정하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믿고 삽시다" 식의 캠페인을 통해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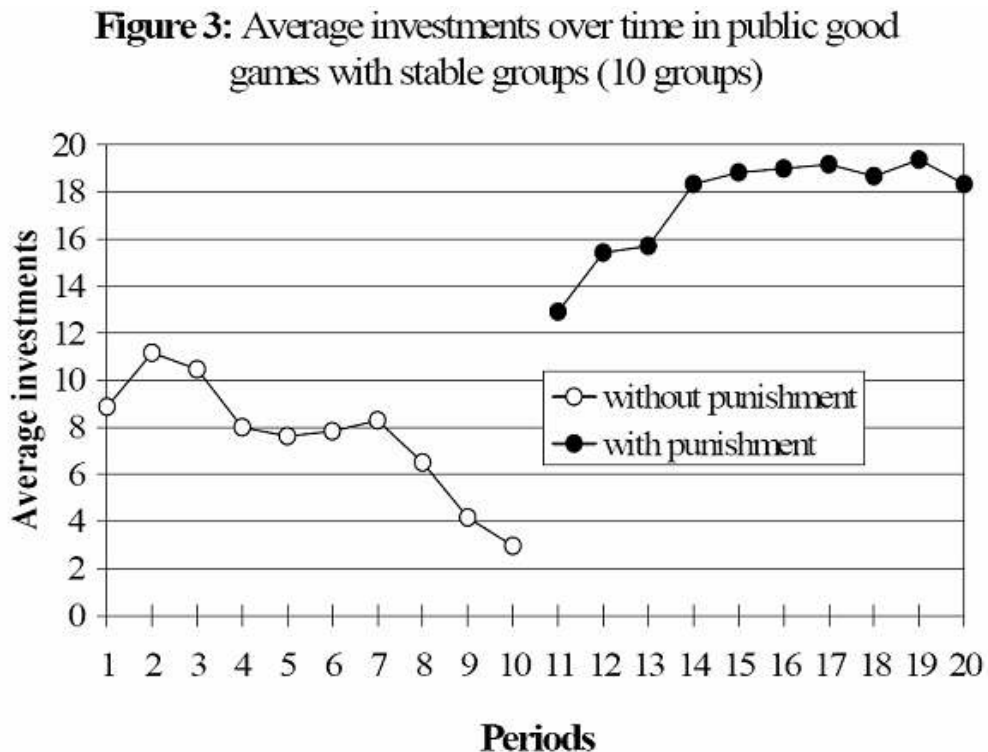
KDI 대학원 (2006)의 연구에서는 호혜성의 개념에 바탕을 둔 일련의 실험 경제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사회적 신뢰가 변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모색해 보았다. (Gintis et. al. (2005) 참조)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이른바 공공재 투자 실험이라고 알려진 일군의 실험 결과이다. 이 실험에서는 4명의 피험자를 한 그룹으로 각자에게 20불씩을 지급한다. 이 돈 가운데 각자가 정하는 만큼을 “공공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하지 않고 간직한 돈은 그대로 해당하는 개인의 소유가 된다. 공공재에 투자된 돈은 2배로 증가되지만 이처럼 증가된 돈은 투자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룹에 속한 4명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1불을 투자했을 경우 우선 2불로 증식되기는 하나, 이 2불이 4명에게 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 개인

의 몫은 0.5불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 애초에 받은 10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의 이론을 원용한다면 아무도 공공재에 투자하지 않고, 공공재는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끝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해 보면 경제학적인 예측과는 달리 개인별 평균 투자액이 가용 자원의 약 50%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당수의 개인이 타인의 선의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게임을 반복했을 경우의 결과이다. 아래 <그림 1>에서 인용하고 있는 Fischbacher, Gaechter, and Fehr (2002)의 결과에 의하면 우선 단순히 이 게임을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급속히 평균 투자액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협력의 소멸이다. 하지만 게임과 게임 사이에 이른바 “punishment opportunity”를 부여했을 경우,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진다. punishment opportunity 라 함은 게임과 게임 사이에 익명 상태에 남아 있는 그룹 내의 다른 개인들의 투자액을 알려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 가운데 일부를 희생하여 타겟이 되는 개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협력이 더욱 공고해 지는 방향으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호혜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우선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하고 협력을 모색하지만,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신뢰가 이용될 뿐인 사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서는 자신의 신뢰와 선의를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조우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을 가할 기회가 있다면 처벌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협력적인 행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룹 내의 타인으로부터 보복을 받음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들 역시 공익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음을 그림의 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반복되는 공공재 투자 실험의 결과



주: Fischbacher, Gächter, and Fehr (2002)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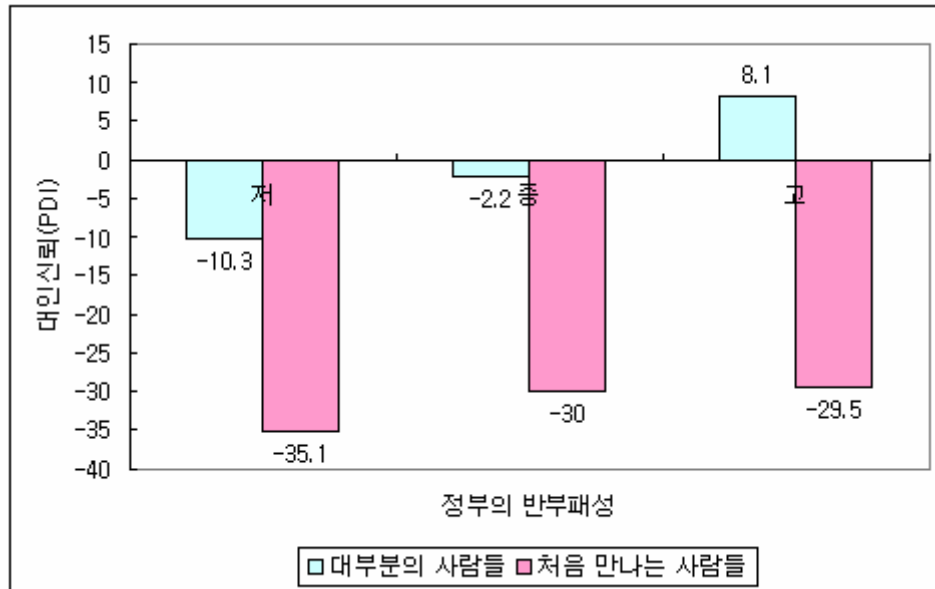
이렇게 본다면 공공재 투자 게임에서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를 추정하면서 그 추정치 연속되는 게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조정 (update)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추정치는 게임의 조건과 각 개인의 경험에 의거하여 위로든 아래로는 변동할 수 있다.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을지 모르나 이 추정치를 사회적 신뢰의 지표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논의된 실험에서는 각 그룹이 4명으로 구성되지만 4천만이 유사한 게임의 확대판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하는 상황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각 개인은 확대된 게임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는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타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특히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묻히는 것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면 각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는 낮아져 갈 것이다.

<그림 2> 정부의 부패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



주: KDI 대학원 (2006)에서 인용.

KDI 대학원 (200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정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의 상관관계를 주목하였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확대된 게임에서 피주목도가 현저히 높은 경기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소개된 <그림 2>는 KDI 대학원 (2006)의 분석결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설문 응답자들을 “정부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들 (고), 부인하는 사람들 (저), 중간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로부터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제하여 얻는 수치를 “대인 신뢰 (PDI)”로 계산하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부패성 뿐 아니라 정부의 준법성, 반응성 (responsivenes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신뢰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회귀식 1	회귀식 2	회귀식 3
정부에 대한 신뢰도	0.22 (0.03)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0.24 (0.03)	
노조에 대한 신뢰도			0.20 (0.03)
상수항	4.08 (0.12)	3.72 (0.16)	3.92 (0.15)
표본의 크기	1391	1393	1388
R squared	0.04	0.04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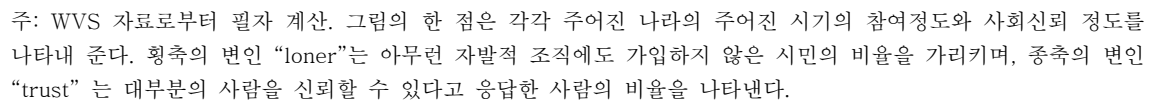
주: 2006년 사회자본 실태조사 자료 이용. 각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는 0-10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적 신뢰도. 독립 변수는 역시 0-10점 척도로 측정한 정부, 대기업, 노조에 대한 신뢰도임.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모든 계수의 추정치는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정부에 국한되어 나타나리라고는 볼 수 없다. 예컨대 대기업, 노조 등 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자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유로 사회신뢰도를 낮게 조정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표 3>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추측에 근거가 없지 않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006년도 사회자본 실태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뿐 아니라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신뢰 혹은 타인에 대한 대인신뢰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추정된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그 크기도 0.2-0.24 정도로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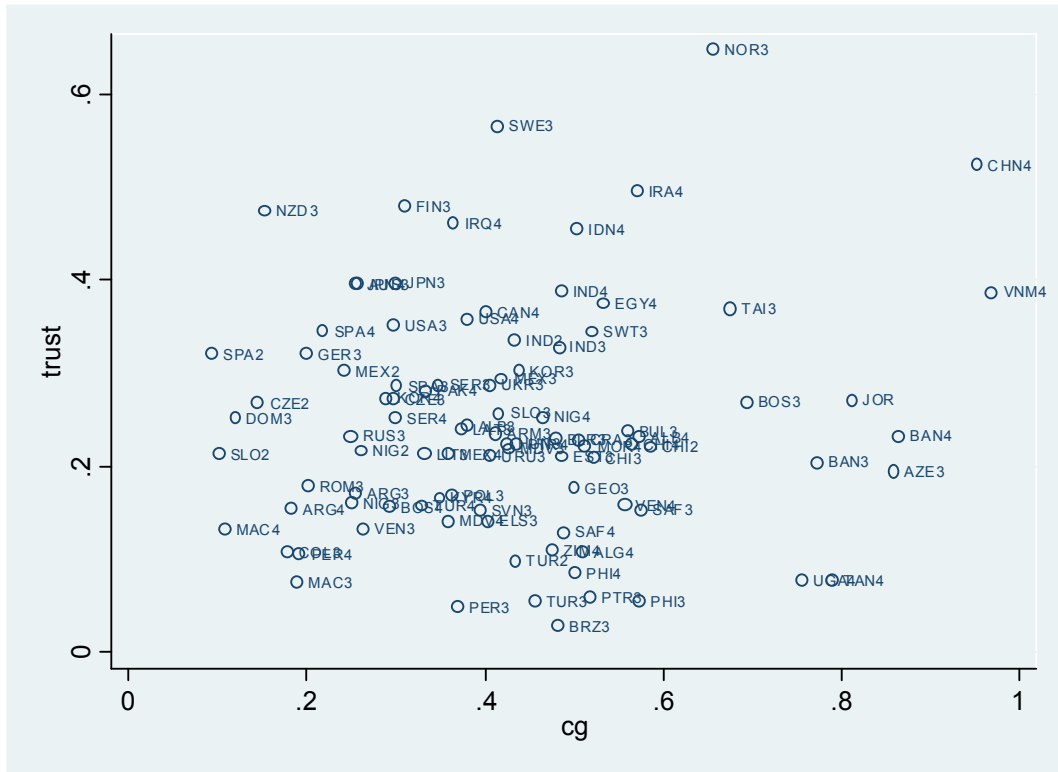
회귀분석으로부터 직접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서의 분석결과는 우선 국민의 대정부 인식을 개선하고 (청렴성, 준법성, 반응성 등), 대기업, 노조 등의 힘있는 집단의 탈법적 행동 혹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다 철저히 규율해 나감으로써 사회신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2006년도의 사회자본 실태조사에서 얻어진 결과 가운데 대단히 의외였던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조직에의 참여 여부가 개인의 사회신뢰와 별다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었다. 구미의 학술 및 정책

〈그림 3〉 자발적 시민단체에의 참여와 사회적 신뢰: 국제비교



<그림 4> 정부에의 신뢰와 사회적 신뢰: 국제비교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그림의 한 점은 각각 주어진 나라의 주어진 시기의 정부에 대한 신뢰정도와 사회 신뢰 정도를 나타내 준다. 횡축의 변인 “cg”는 confidence in government 혹은 정부에 대해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며, 종축의 변인 “trust”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3>과 <그림 4>는 WVS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행함으로써 자발적 단체에의 참여와 사회적 신뢰 (그림 3),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신뢰 (그림 4) 사이의 상관관계를 짚어 본다. 그림에서 명확히 들어나는 것처럼 참여와 신뢰 사이의 상관관계는 강력한 반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신뢰 사이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구미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참여를 강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회귀분석을 해 볼 경우 <그림 3>에서의 관계는 추정계수로 볼 때 강력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상관관계는 나라별로 후기와 초기 사이에 참여의 정도의 차를 구하고 사회신뢰도의 차를 구하여 이 양자를 비교해 보더라도 살아남는다. 다시 말해서 참여도가 떨어진 나라에서는 사회신뢰도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참여도가 제고된 나라에서는 반대로

사회신뢰도 올라가는 경향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그림 4>에서의 관계는 계수의 값도 작고 통계적 유의성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더 나아가 시기 사이의 차분 값 끼리의 상관을 구하면 상관관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온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 나라에서 사회신뢰가 올라가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사회에서 사회신뢰가 함께 떨어지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회자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참여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독 한국에서만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에의 참여가 사회적 신뢰의 제고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지금의 단계에서는 가설적 추측의 역을 벗어 날 수 없겠으나, 우리나라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자발적 단체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조직이 그것으로 비교적 폐쇄적이며, 권위의 분포에 있어 수직적이고, 구성원의 배경에 있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부류의 단체를 제외하면 우리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발적 단체의 종류와 활동정도는 지극히 빈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의 정도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의 저하와 관련이 있을까? 체계적인 분석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일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사회의 자발적 단체 참여도가 워낙 낮은 상태에 있어, 설령 참여가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9% 넘게 저하된 사회적 신뢰도의 변화를 참여도의 저하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성별로 네 차례에 걸친 WVS 조사에 있어 사회적 신뢰도의 추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어떤 그룹에 있어 보다 현저하게 사회적 신뢰도의 저하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에 있어 사회적 신뢰도가 동태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 받는지를 짚어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표 4> 출생 세대별 사회적 신뢰도 변동 추이

세대	1990년	1996년	2001년	2001년-1990년
30년대 이전 출생	0.34	0.31	0.29	-0.05
40년대 출생	0.29	0.29	0.25	-0.04
50년대 출생	0.37	0.30	0.29	-0.08
60년대 출생	0.34	0.31	0.28	-0.06
70년대 출생	0.31	0.31	0.26	-0.05

<표 5> 남녀 성별 사회적 신뢰도 변동 추이

성별	1982년	1990년	1996년	2001년	1982년-1990년
남자	0.40	0.30	0.32	0.26	-0.14
여자	0.32	0.37	0.29	0.28	-0.04

주: WVS 로부터 필자 계산. 1982년의 경우 개인의 출생년도에 관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었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세대별로 사회적 신뢰도의 변동 추이를 보여 주는 것이 <표 4>이다. 세대별로 보았을 때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은 초기 즉 1990년의 경우 세대 간에 사회적 신뢰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대간 차이가 미약해져 왔다는 점이다. 이는 타세대에 비해 비교적 사회적 신뢰도가 높았던 50년대 출생자 집단이 특히 90-96년 사이에 비교적 큰 폭의 신뢰도 저하를 경험하면서 타집단과 구별하기 힘들어진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들의 어떤 경험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

<표 5>는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사회적 신뢰도의 변동 추이를 추적한 결과를 정리해 보여준다. WVS에서 1982년 자료의 경우 온라인 데이터로부터 출생년도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부득불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추적한 결과를 <표 4>가 보여 주고 있으나, 남녀 성별의 경우 1982년부터 모든 조사 연도에 걸쳐 자료가 있으므로 <표 5>는 82년부터 2001년까지의 변화를 추적해 주고 있다.

남녀간을 비교해 보더라도 세대별 비교와 마찬가지로 당초 상당한 폭으로 존재하던 남녀간 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경향을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에 비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았던 남자 그룹이 특히 82년-90년에 걸쳐 신뢰도의 급격한 저하를 보여 주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어떤 경험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는 역시 추후의 연구과제로 일단 남겨 두기로 한다.

IV. 결론

이상에서 2006년도 사회자본 실태조사의 자료와 WVS의 1981-2004년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어 사회적 신뢰도의 수준의 추이를 점검하고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시론적으로나마 살펴 보았다.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2년부터 2001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0.36에서 0.27로 10% 가깝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폭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Knack and Keefer가 보고한 것처럼 10%의 신뢰도 하락이 0.8% 만큼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로 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내전과 독재 등 20세기의 역사적 경험들이 우리와 비교적 유사한 스페인이 최근 들어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 경향을 저지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한 변화를 우리도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둘째, WVS의 자료를 이용,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시민사회에의 참여와 사회신뢰도의 상관관계는 높고 강하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신뢰의 상관관계는 약하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사회자본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으로 시민사회 자발적 조직의 특성을 포함,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의 패턴에 특수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의 시민사회라는 그릇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에 대한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기하는 전통적 처방은 우리나라에서 유효성에 한계가 있으리라 짐작케 한다.

셋째, 2006년도의 KDI 대학원 연구에서는 정부에의 신뢰와 사회신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부에의 신뢰만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부분적이고 전체상을 놓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부 외에도 대기업, 노조 등 힘있는 집단에 대한 신뢰/불신 여부는 마찬가지로 사회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신뢰의 확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우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키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한편, 대기업, 노조 등 힘있는 집단에 대한 범규범의 적용을

가일층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이 법에 의해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는 보다 많은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세대별, 성별로 사회적 신뢰도의 추이를 추적해 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히 90-96년 (82-96년?) 사이에 50년대 출생자 집단의 사회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남자의 경우 82년-90년 사이에 역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현상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아쉽지만 이 집단들이 해당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기에 사회적 신뢰도가 큰 낙차를 보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를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KDI 국제정책대학원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Fukuyama, F. (1996)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Gintis, H., Samuel Bowles, Robert T. Boyd, and Ernst Fehr (ed.) (2005) "Moral Sentiments and Material Interests: The Foundations of Cooperation in Economic Life." MIT Press.

Knack, S. and Phili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pp. 1251-1288.

Putnam, Robert D. (1994)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D., Lewis Feldstein, and Donald J. Cohen. (2004)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huster.

Temple, J. and Paul A. Johnson. (1998) "Social Capability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No. 3, pp. 965-990.

부록

<표 A-1> 사회신뢰 국제 비교 (WVS 1981-84)

국가	사회신뢰	순위
NOR	0.55471	1
SWE	0.520964	2
DEN	0.472081	3
CAN	0.470494	4
AUS	0.466612	5
NIR	0.419872	6
GBR	0.416452	7
IRE	0.395234	8
USA	0.393548	9
NET	0.39312	10
ICE	0.390507	11
JPN	0.378738	12
KOR	0.35979	13
SPA	0.329136	14
HUN	0.323087	15
GEW	0.268199	16
ITA	0.258902	17
BEL	0.255022	18
ARG	0.236816	19
FRA	0.230833	20
MTA	0.094218	21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사회신뢰는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표 A-2> 사회신뢰 국제 비교 (WVS 1989-93)

국가	사회신뢰	순위
NOR	0.606941	1
SWE	0.595989	2
FIN	0.595238	3
CHN	0.594	4
DEN	0.55534	5
CAN	0.513295	6
NET	0.507375	7
USA	0.494834	8
IRE	0.468	9
NIR	0.427632	10
GBR	0.423854	11
ICE	0.417379	12
JPN	0.375866	13
RUS	0.347272	14
ITA	0.337958	15
KOR	0.335731	16
IND	0.3352	17
SPA	0.320955	18
BEL	0.309097	19
LIT	0.308	20
MEX	0.302417	21
BUL	0.287234	22
POL	0.284375	23
ATA	0.283562	24
GER	0.276986	25
SAF	0.276316	26
EST	0.275794	27
CZE	0.268381	28
SWT	0.262857	29
BLR	0.250246	30
HUN	0.238238	31
MTA	0.226463	32
ARG	0.223553	33
CHI	0.220667	34
NIG	0.216783	35
FRA	0.213573	36
SLO	0.212859	37
PTG	0.210127	38
LAT	0.190476	39
SVN	0.163285	40
ROM	0.157752	41
TUR	0.098058	42
BRZ	0.063973	43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사회신뢰는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표 A-3> 사회신뢰 국제 비교 (WVS 1994-99)

국가	사회신뢰	순위
NOR	0.647737	1
SWE	0.565907	2
CHN	0.504	3
FIN	0.47923	4
NZD	0.474605	5
JPN	0.397533	6
AUS	0.395996	7
TAI	0.369231	8
USA	0.35214	9
SWT	0.344885	10
IND	0.328431	11
GER	0.321323	12
KOR	0.302642	13
MEX	0.293993	14
GBR	0.290942	15
UKR	0.287798	16
SER	0.2875	17
SPA	0.28654	18
CZE	0.272014	19
BOS	0.269167	20
SLO	0.257534	21
DOM	0.251799	22
ALB	0.243243	23
LAT	0.239167	24
BUL	0.23694	25
ARM	0.235	26
RUS	0.232353	27
BLR	0.229924	28
CRA	0.228261	29
HUN	0.224615	30
MDV	0.218496	31
LIT	0.213082	32
URU	0.211	33
EST	0.210578	34
CHI	0.209	35
BAN	0.20459	36
AZE	0.194306	37
PAK	0.186903	38
ROM	0.179177	39
GEO	0.176793	40
ARG	0.171455	41
POL	0.169124	42
NIG	0.160321	43

SAF	0.153663	44
SVN	0.15293	45
ELS	0.141148	46
VEN	0.133333	47
COL	0.10722	48
MAC	0.075377	49
PTR	0.059278	50
PHI	0.055	51
TUR	0.054536	52
PER	0.04872	53
BRZ	0.02785	54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사회신뢰는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표 A-4> 사회신뢰 국제 비교 (WVS 2001-2004)

국가	사회신뢰	순위
DEN	0.641251	1
SWE	0.636453	2
NET	0.597208	3
FIN	0.561657	4
CHN	0.525	5
SAR	0.505326	6
IRA	0.496051	7
IRQ	0.460645	8
IDN	0.455179	9
JPN	0.396476	10
ICE	0.392562	11
IND	0.388611	12
VNM	0.387	13
BLR	0.38	14
NIR	0.38	15
EGY	0.374667	16
CAN	0.365614	17
USA	0.359167	18
GER	0.357073	19
IRE	0.352767	20
SPA	0.345372	21
ITA	0.3175	22
ATA	0.310775	23
PAK	0.2815	24
BEL	0.278766	25
GBR	0.277	26
KOR	0.273333	27
JOR	0.270646	28
UKR	0.258577	29
NIG	0.253215	30
SER	0.25177	31
BUL	0.251	32
LIT	0.246562	33
CZE	0.240566	34
LUX	0.235343	35
BAN	0.232667	36
ALB	0.232	37
RUS	0.2316	38
ISR	0.228524	39
CHI	0.224167	40
PTR	0.223611	41
EST	0.222886	42
MOR	0.221732	43

HUN	0.219	44
MEX	0.213029	45
SVN	0.21173	46
FRA	0.206192	47
GRE	0.204904	48
MTA	0.204591	49
CRA	0.198405	50
POL	0.178082	51
LAT	0.166831	52
KYR	0.165868	53
VEN	0.158333	54
TUR	0.157803	55
BOS	0.155833	56
ARG	0.154688	57
SLO	0.15402	58
SIN	0.145503	59
MDV	0.140873	60
MAC	0.132701	61
SAF	0.129	62
PTG	0.12	63
ZIM	0.10978	64
ALG	0.107644	65
PER	0.105929	66
ROM	0.098604	67
PHI	0.085	68
UGA	0.077844	69
TAN	0.076857	70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사회신뢰는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사회적 자본 합동세미나

사회적 신뢰의 추이에 관한 국제비교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07년 9월 5일

보고의 개요

- 사회적 신뢰의 의의
- 사회적 신뢰 추이: 국제비교
- 사회적 신뢰 저하: 원인 분석

사회적 신뢰의 의의

- 정의와 측정: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 네트워크, 규범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어떤 의미에서는 제 구성요소의 summary statistic
- Knack and Keefer: 사회적 신뢰도 10% 증가 → 경제성장률 0.8% 증가
- 호혜성과 상호작용

사회신뢰의 수준 및 추이의 국제비교

국가	I (81-84)	II (89-93)	III (94-99)	IV (99-04)	IV-I
한국	0.36 (13/21)	0.34 (16/43)	0.30 (13/54)	0.27 (27/70)	-0.09
미국	0.39 (9/21)	0.49 (8/43)	0.35 (9/54)	0.40 (18/70)	0.01
일본	0.38 (12/21)	0.38 (13/43)	0.40 (6/54)	0.40 (10/70)	0.02
영국	0.42 (7/21)	0.42 (11/43)	0.29 (15/54)	0.28 (26/70)	-0.14
스웨덴	0.52 (2/21)	0.60 (2/43)	0.57 (2/54)	0.64 (2/70)	0.12
스페인	0.33 (14/21)	0.32 (18/43)	0.29 (18/54)	0.35 (21/70)	0.02
캐나다	0.47 (4/21)	0.51 (6/43)	N/A	0.37 (17/70)	-0.1

주: WVS. 한국의 경우 1982, 90, 96, 2001년 자료

<표 2> 사회신뢰도가 증가하는 나라와 하락하는 나라

신뢰도가 증가하는 국가	방글라데시, 벨기에,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인디아, 이태리, 일본, 몰타,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 리코, 스페인,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베네주엘라
신뢰도가 하락하는 국가	알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남아공화국,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0.24→0.15), 멕시코 (0.30→0.21), 한국 (0.36→0.27), 보스니아 (0.27→0.16), 헝가리(0.32→0.22), 리투아니아 (0.31→0.25), 몰다비아 (0.22→0.14), 폴란드 (0.28→0.18), 라트비아 (0.31→0.25), 루마니아 (0.16→0.1), 러시아 (0.35→0.23), 중국 (0.59→0.53), 오스트레일리아 (0.47→0.40), 캐나다 (0.47→0.37), 영국 (0.42→0.28),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조사기간 중 신뢰도가 하락한 국가 가운데 하락폭이 5%, 즉 0.05를 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수치를 괄호 안에 제시하였음.

사회신뢰 변동의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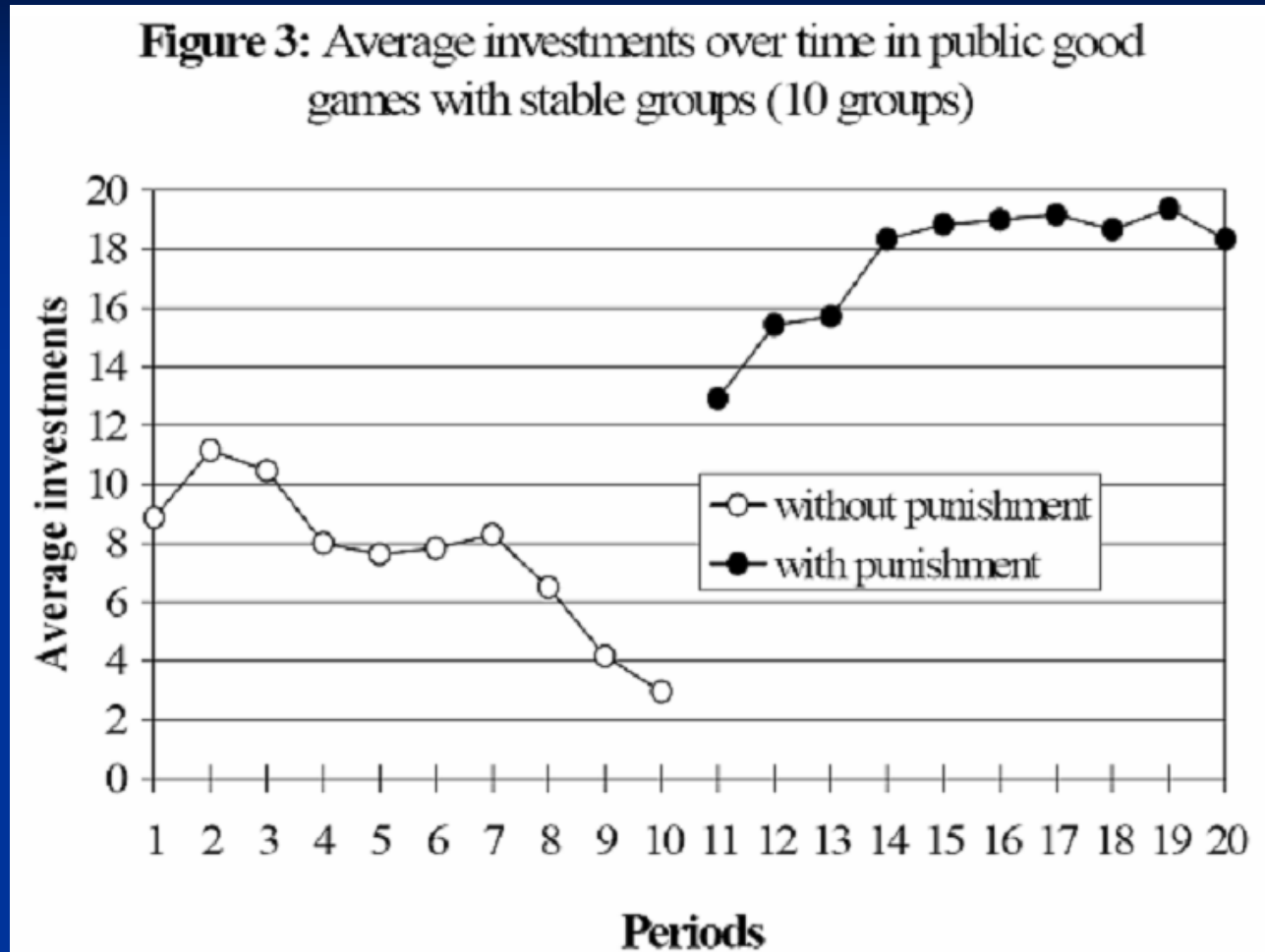
- 시민사회의 활성화: 자발적 조직에의 참여
- 정부의 역할: 호혜성의 개념
- 상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 바람직
- 사회적 자본 변동의 경로 의존성, 국가별 특수성

사회적 자본과 호혜성

■ 공공재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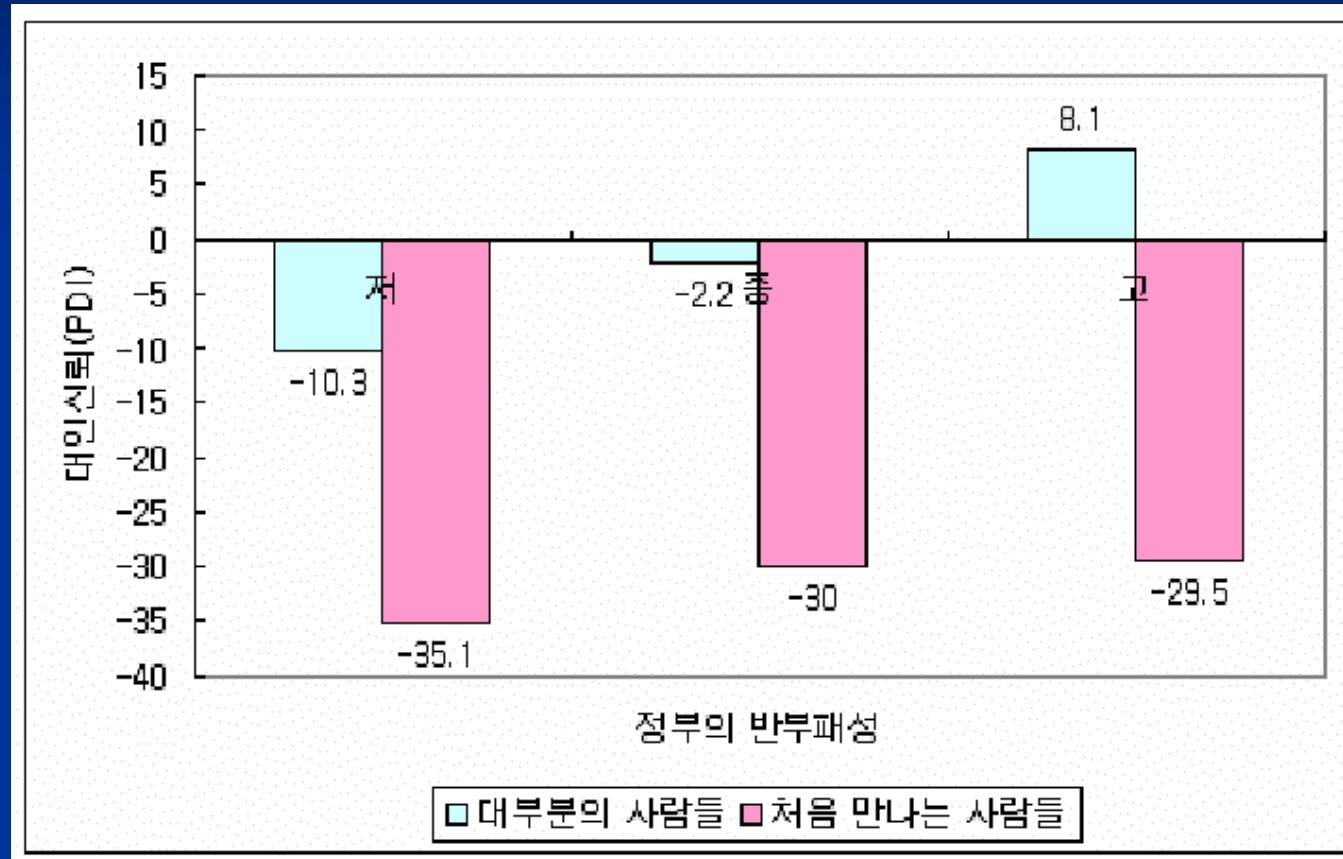
- 한 그룹 4명으로 구성
- 각자 20 달러로 시작
-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 것
- “공공재”에 1달러 투자할 경우 모든 사람에게 0.5달러의 이득 (사회적 이득= $-1+0.5*4=1$)
- 하지만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손실 (개인적 이득= $-1+0.5=-0.5$)
- 경제이론에 의하면 모두의 무임승차가 균형
- 실제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액수를 투자

<그림 1> 반복되는 공공재 투자 실험의 결과



주: Fischbacher, Gächter, and Fehr (2002)에서 인용.

<그림 2> 정부의 부패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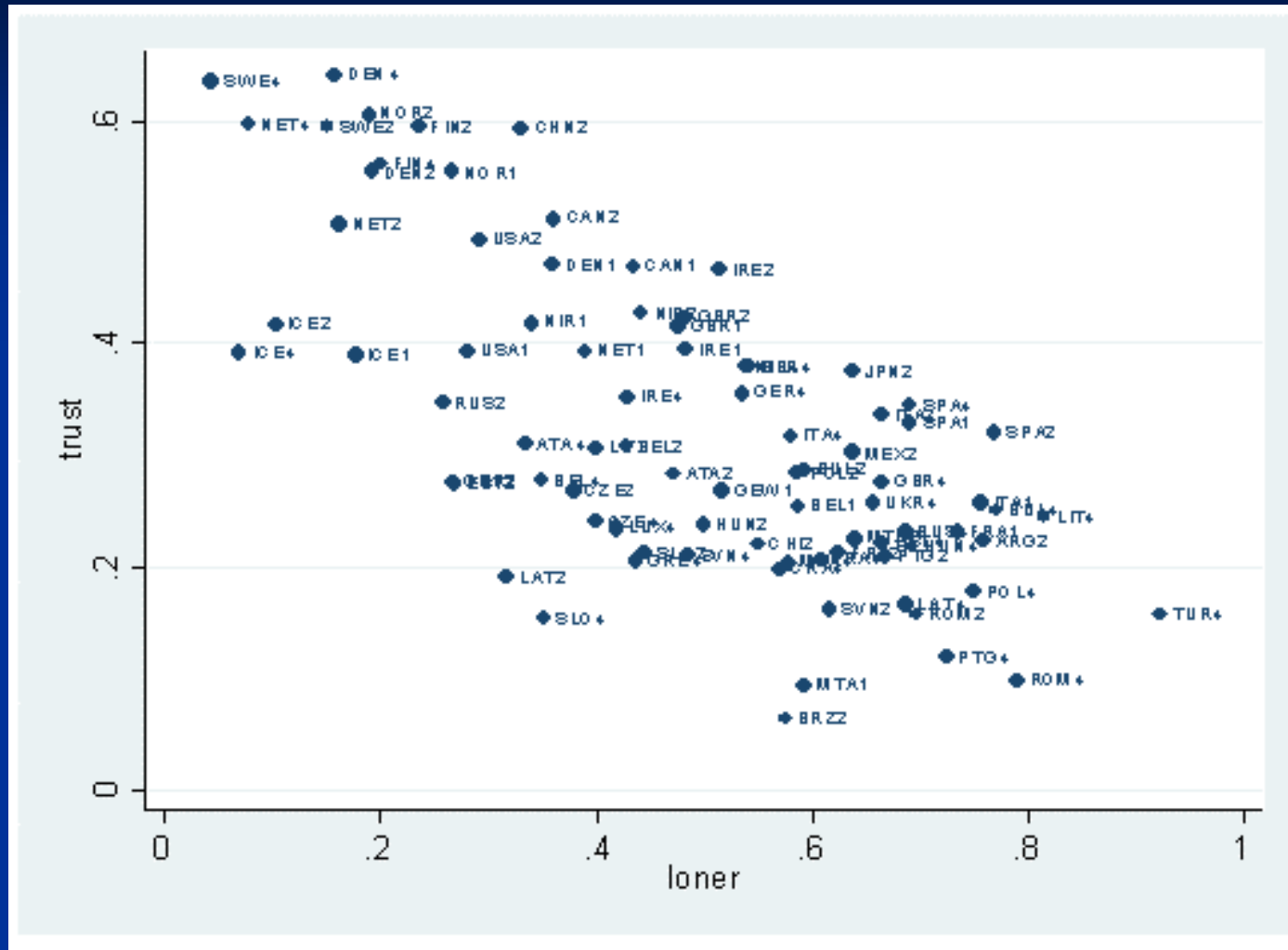
주: KDI 대학원 (2006)에서 인용.

<표 3>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신뢰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회귀식 1	회귀식 2	회귀식 3
정부에 대한 신뢰도	0.22 (0.03)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0.24 (0.03)	
노조에 대한 신뢰도			0.20 (0.03)
상수항	4.08 (0.12)	3.72 (0.16)	3.92 (0.15)
표본의 크기	1391	1393	1388
R squared	0.04	0.04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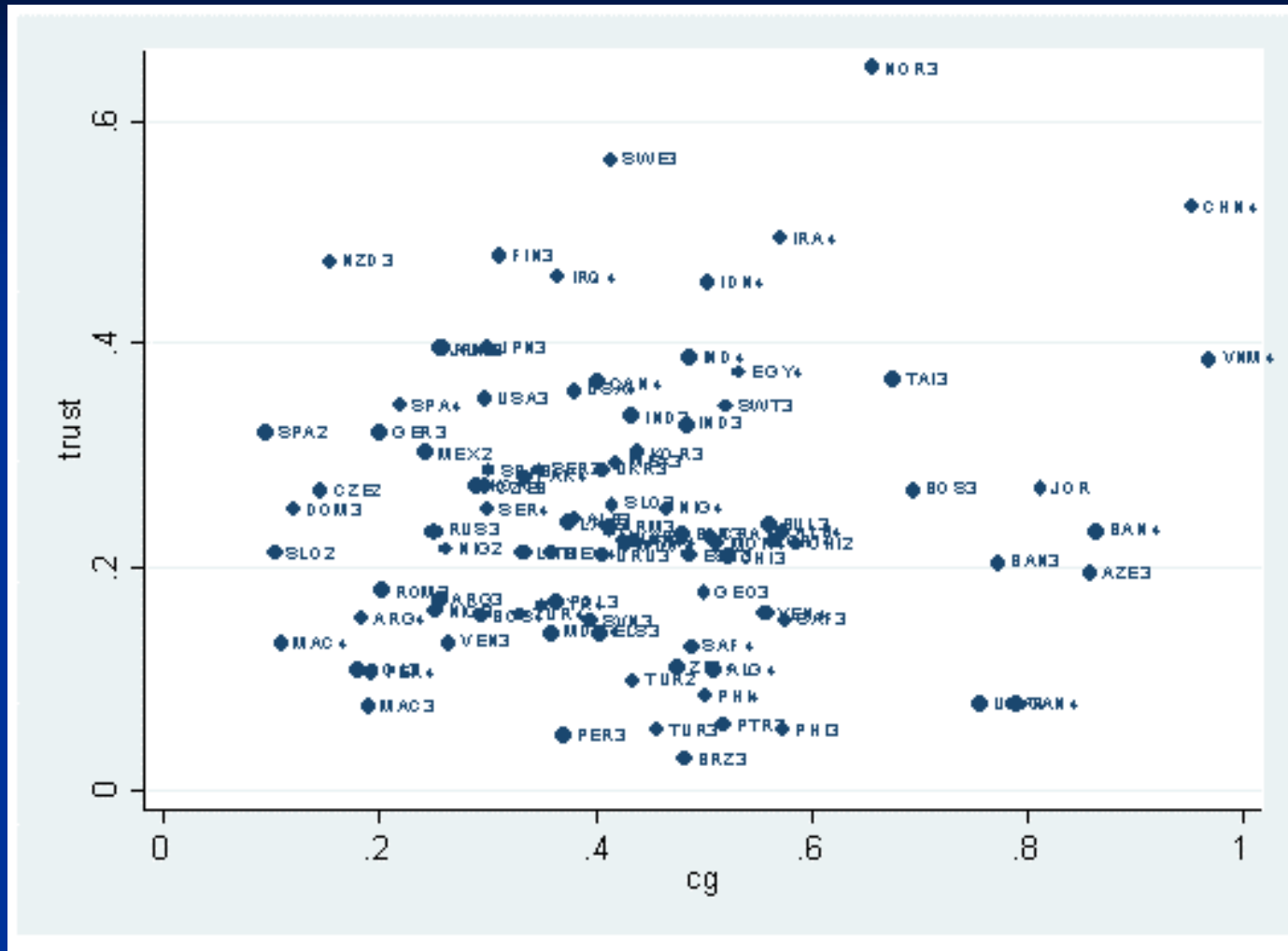
주: 2006년 사회자본 실태조사 자료 이용. 각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는 0-10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적 신뢰도. 독립변수는 역시 0-10점 척도로 측정한 정부, 대기업, 노조에 대한 신뢰도임.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모든 계수의 추정치는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

<그림 3> 자발적 시민단체에의 참여와 사회적 신뢰: 국제비교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그림의 한 점은 각각 주어진 나라의 주어진 시기의 참여정도와 사회신뢰 정도를 나타내 준다. 횡축의 변인 “loner”는 아무런 자발적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은 시민의 비율을 가리키며, 종축의 변인 “trust”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4> 정부에의 신뢰와 사회적 신뢰: 국제비교



주: WVS 자료로부터 필자 계산. 그림의 한 점은 각각 주어진 나라의 주어진 시기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신뢰 정도를 나타내 준다. 횡축의 변인 “cg”는 confidence in government 혹은 정부에 대해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며, 종축의 변인 “trust”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4> 출생 세대별 사회적 신뢰도 변동 추이

세대	1990년	1996년	2001년	2001년-1990년
30년대 이전 출생	0.34	0.31	0.29	-0.05
40년대 출생	0.29	0.29	0.25	-0.04
50년대 출생	0.37	0.30	0.29	-0.08
60년대 출생	0.34	0.31	0.28	-0.06
70년대 출생	0.31	0.31	0.26	-0.05

<표 5> 남녀 성별 사회적 신뢰도 변동 추이

성별	1982년	1990년	1996년	2001년	1982년-1990년
남자	0.40	0.30	0.32	0.26	-0.14
여자	0.32	0.37	0.29	0.28	-0.04

주: WVS로부터 필자 계산. 1982년의 경우 개인의 출생연도에 관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었음.

정책적 함의

- 목적중심의 통합 vs. 규칙중심의 통합
 - Teleocratic order vs. nomocratic (Hayek)
 - Mechanical solidarity vs. organic (Parsons)
- 정부, 대기업, 노조, 언론 등 “힘있는” 집단의 규칙준수 강화가 관건
 - 법규범의 명확화
 - 법 집행의 강화
-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arms-length 로 지원
- 사이버 공동체의 역할 주목
-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지속적 연구 지원